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공평한 시대의 징후와 표상에 대하여

단어 '변신 놀이'다. 변하지 않았고 애초에 생각조차 없었지만, 달라진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변신 놀이는 카프카의 그 유명한 '변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카프카의 변신은 자신의 구조화된 권력 앞에서 별레와 같은 삶을 사는 인간의 의미를 묻는다.

반면에 우리가 목격하는 변신 놀이는 환상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시간에 역행하며 그 이득으로 권력을 얻는다. 그래서 같은 소리, 같은 얼굴, 같은 몸짓은 반복된다. 그 반복을 허용하는 관객의 모습도 반복된다. 연예인이 국민의 역사 교육을 담당하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스스로 법이 되어서 또 다른 제국을 건설하고, 정치가들은 누가 몇 번이나 연예 프로에 나왔는지를 따져 보는 사이에 학자를 자칭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점치는 예언자 놀이를 한다. 자, 이제 우리의 시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지 않은가?

반복적 행동이 일어나는 밑바닥에는 정형화된 일정한 정서가 작용한다. 우리가 어떤 정서에 자주 휩쓸리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끌림과 흠림이라는, 일상적이지만 사실은 특별한 정서다. 이 두 정서는 본질에서 맹목적이고 충동적이다. 끌림은 의지와 판단 이전에 이미 마음의 움직임이 지배하는 상태다. 그에 비해 흠림은 대상에 사로잡힌 상태의 감정이다.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뒤떨린 현상들의 배후를 설명하는 정서를 읽을 수 있다. 끌림과 흠림은 권력의 생산과 확장에 가장 좋은 수단이자 전략인 것이다.

물론 끌림은 아주 특별한 정서로 친밀한 관계 맺기에

서 가장 우선적이고 생산적인 조건이어서 끌림이 없이는 서로에게 가까워지기도 어렵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끌림의 정서는 합리적 인식과 판단 없이 맹신을 바탕으로 삼는 것이다. 이런 끌림의 본질에 대해서 스피노자(1632-1677)는 '에티카'에서 이렇게 말한다. "끌림이란 우연에 의해 기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사물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이다." 끌림이 주는 기쁨은 우연에 의한 것으로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참된 기쁨은 오직 사랑이라는 필연에서 나오는 것으로, 성장과 변화의 힘이 된다. 그래서 끌림이 주는 기쁨은 '유사 기쁨'으로 대리의 감정이며 심지어 매매와 전이도 가능하다. 흠림의 정서 또한 끌림과 별반 다르지 않다. 흠림은 '흠림'에서 나온 것이니, 유혹하거나 당한 정신의 포획과 복종을 말하는 정서다.

이런 끌림과 흠림이 공적·사회적 영역에서 거침없이 박수를 받을 때, 제자리를 이탈하고 나선 것들이 힘과 영향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새해의 시간이 본성에 맞게 흐르는 방법은 하나다. 사라져야 할 것들이 정말 사라지고, 살아 있어야 할 것들이 살아서 성장하고, 마땅히 시작되어야 할 것들을 시작하는 것이다.

마침 올라브 하우게의 시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온다. "그들이 국회에 앉아 있다/ 플라톤도 읽지 않은 그들이." 시 속의 그들은 무지의 폭력성을 말하는 것이니, 국회 대신에 우리의 시간이 가야 하는 길을 막아서는 모든 것의 이름을 써도 무방하리라.

새해맞이의 감흥 대신, 다 써 버린 시간 위에 슬쩍 새로운 숫자를 표기하는 것 같은 이 기사감은 어디에서 오는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 등등,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새 시작은 끝이 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가 행하는 무엇인가를 일 혹은 경험,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삶이라고 말한다. 이 '무엇들'이 합부로 영클어지거나 앞뒤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정리하고 분류하는 형식과 방법의 끝 시간이라는 단어다. 어제·오늘·내일로 나누고 시간의 흐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모든 것은 반복될 것이다. 어제와 오늘이 그대로 계속 되면서 내일은 사라진 단어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의 반복을 은폐하고 위장하는 수

기고

'공원 총량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성 조사의 기본 방향은 국립공원 내 자연·문화·경관 자원 보전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국립공원 내 거주민과의 상생, 자원·협력 사업 기반 확보 등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각 공원별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주민들의 반발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40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으니 돌려 달라는 것이다.

이번 변경안을 보면 22개 국립공원 전체 공원구역 면적이 105.5㎢를 편입하고 2㎢를 해제해 지금보다 1.5%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각 국가 육상 면적의 17% 이상을 2020년까지 보호 지역으로 확대하는 권고를 했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면적을 해제하기보다 추가 지정하기 위해 주민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청회가 열리는 곳마다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과 주민 여론이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법 규정도 없는 '공원 총량제'를 이유로 주민을 설득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대신 편입과 해제 대상지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문화·경관 자원 보전 및 관리 등 국립공원으로 관리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국립공원내 지역 생태계 자원 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생태계 보전 및 복원·회복

으로 자연·문화경관 관리 대상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탐방객, 토지소유자, 시민단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국립공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공원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공원 구역에 속한 지역민들은 각종 개발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재산권을 침해 당하면서 공원 구역의 편입·해제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들의 의견을 귀담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를 겪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현재와 달리 크게 변화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야외 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의 산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산림이 주는 온실가스 흡수, 휴양지 제공, 산소 생산, 열섬 완화 등의 혜택 덕분에 국립공원을 찾는 방문객은 꾸준히 늘어남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나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각 국립공원마다 자연 자원과 문화 자원, 경관 자원, 지형, 거주민, 공원 경계 지역의 개발, 환경 보전 상황, 토지 이용, 탐방객 등 대한 세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빅데이터로 보전과 서비스 지역을 철저히 구분해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공원 총량제를 이유로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려는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윤병선
전 전남도 산림산업과장

1967년 3월 3일 국립공원 제도 도입을 담은 '공원법'이 공포됐으니 올해로 국립공원 지정 54주년을 맞는다. 국립공원은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모두 22개소로, 공원 구역의 총면적은 6726.298㎢이다. 국토 면적 10만 401㎢ 중 6.71% 수준이다. 호주 4.36%, 독일 2.7% 캐나다 3.78% 미국 2.16% 그리스 3.6% 등과 비교해 국토 대비 국립공원 비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10년마다 공원 구역의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다.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 등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원구역 편입과 함께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제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지난해부터 세 번째 타당성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3차 변경 타당

社說

한전공대법 2월 임시국회선 반드시 처리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관련법안(한전공대법)이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2022년 3월로 예정된 정상 개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현재 해 11월 상임위 회부 이후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해당 법률안은 한국에너지공대를 '특수법인' 형태로 하여, 학생 및 교원 선발 과정에서 대학 자율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단순 사립학교 형태로 대학을 설립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 재정 지원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입법 조치다.

한전공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현행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는 대학 설립 주체가 개교 12개월 전까지 교사를 준공해야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교사 확보가 돼 있지 않은 한전공대의 경우 설립 인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특례 조항이 담겨 있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상 개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며 지역민의 숙원 사업인 한전공대 정상 개교는 그러나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야당인 국민의힘 위원 일부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180석의 거대 여당 체제인데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정부와 여당의 지역 숙원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일부 반대가 있긴 하지만 야당이 당 차원의 조직적 반발 기류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한전공대의 학생 모집 등 정상 개교를 위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 '명예의 전당'에 성범죄자를 올렸더니

광주시가 공동체에 크게 헌신한 '영웅'들을 기린다는 취지로 조성한 '명예의 전당'이 문을 열자마자 논란에 휩싸였다.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의 명단에 과거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엇그제 광주시청 1층에 개관한 명예의 전당에는 1987년부터 시상된 사회봉사·학술·예술·체육·경제 진흥 분야의 역대 '시민대상' 수상자 153명과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인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 114명 등 26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한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인물 중 몇몇은 과거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거나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경제계 인사들이었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이거나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경찰에 입건된 인사, 무리한 투자 유치로 피해자를 양산한 인물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물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명예의 전당 이미지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여길 사안은 아니다. 더욱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에서 독립운동이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지역 인사들이 빠져 있다는 점도 시민의 눈높이와는 어긋난다. 코로나 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일상 속에서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 영웅들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광주의 영웅은 고액 기부자와 시민대상 수상자들뿐이냐는 자조 섞인 푸념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은 논의 과정에서 시민 사회를 배제한 채 행정의 일방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인사들의 선정 기준을 세밀히 마련하고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無等鼓

영혼의 맛 또는 영혼을 흔들 만큼 잊을 수 없는 맛을 '소울 푸드'라고 한다. 사람마다 소울 푸드에 대한 정의는 다를 것이다. 식성이나 기호, 혹은 추억 등에 따라 제마다 다른 음식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손맛이 갖는 음식이나 고향의 정이 담긴 원초적인 맛을 이야기할 것 같다.

원래 소울 푸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전통 음식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노예제가 있었던 당시, 백인들의 차별과 냉대를 견뎌야 했던 흑인들의 아픔이 담겨 있다. 허드렛일과 위험한 일을 마치고 먹었던 음식은 잡사나 밀

가시고 외갓집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해 주시던 무뎌진지를 지금도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한국인의 밥상' 작가로 4년간 함께했던 김준영 씨가 쓴 책 '구해줘, 밥'(2020)에는 다양한 사연이 나온다. 김작가는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으로 곡성 토란 죽을 꼽는다. 쉰 넘어 고향으로 돌아온 딸이, 어린 시절 자신을 위해 어머니가 끊어 주시던 토란 죽을 만들어 치매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는다는 얘기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어머니이지만, 그날 만든 딸을 알아본다. 아흔이 다 된 노모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내 딸 왔구나. 내 새끼야... 우리 딸 참 예쁘다. 정말 예쁘다"라며 보석 만지듯 어루만진다.

한국인의 밥상

얼마 전 KBS TV 인기 프로그램인 '한국인의 밥상'이 10주년을 맞았다. 제작진은 밥상에 담긴 한국적인 맛을 발견하기 위해 무려 지구를 여덟 바퀴나 돌 수 있는 거리를 다녔다 한다. 한국적인 배우 최불암 씨는 특유의 편안하고 진솔한 이미지로 '한국인의 밥상'을 장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

영혼의 맛 또는 영혼을 흔들 만큼 잊을 수 없는 맛을 '소울 푸드'라고 한다. 사람마다 소울 푸드에 대한 정의는 다를 것이다. 식성이나 기호, 혹은 추억 등에 따라 제마다 다른 음식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손맛이 갖는 음식이나 고향의 정이 담긴 원초적인 맛을 이야기할 것 같다.

기고

광주시의회, 빛나는 의정 활동을 성과를 기대하며

난 연 평균 42회를 개최, 전국 광역의회 중 최다를 기록했다. 그 성과는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 등에 적극 반영했다. 또한 상임위별로 정쟁이 되는 시정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의 답을 현장에서 찾아내는 현장 맞춤형 토론회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광역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동시 생중계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하고 의정 문화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은 의원 연구 단체 모임 운영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실무자 중심의 사전 실무 심사단을 구성하여 유사 중박 과제 선별, 연구 목적에 부합된 과제 선정, 용역비 단가 등 시행 기준안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과제 또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사안을 선정하여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선도해 나갈 정도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정책 네트워크는 전문가들의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의제 개발과 정책 대안 수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의원 연구 과제의 경우 제8대의 회에서 605건을 접수받아, 그중 489건의 자치 입법 조례를 제·개정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 서았다.

이렇듯 끊임없는 연구와 다양한 정책 제안들은 큰 성과로 이어졌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의회 우수 조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대상과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또한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의회 우수 조례 경진대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우수 조례로 선정되어 최우수 기관 및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에는 입법정책 담당관실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혁신이 뒷받침이 되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행사나 회의 개최가 제한됐음에도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활발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자치분권 시대를 앞당기고 의회가 각종 정책 연구 개발과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정 활동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신축년 새해, 150만 광주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조영무
광주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 주민의 자치 참여 보장,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시민사회와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해 오고 있다.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의원 연구 단체 운영, 정책 연구 용역 추진, 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생생한 시민의 소리가 반영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등 의정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

특히 정책 토론회의 경우 제7대 의회보다 두 배 늘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